

****1번 문제 해설****

* ****정답:**** ④

* ****해설:**** ④번 선지는 '통제적 정책 결정' 영역에서 무의사결정이 더 빈번하다고 말하지만, 지문 2문단에 따르면 무의사결정은 정부가 '선택할 수 있는 여지'가 있을 때, 즉 '선택적 판단 영역'에서 주로 발생합니다. '통제적 정책 결정'은 정부가 반드시 특정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무의사결정 개입 여지가 적습니다. 따라서 선지 ④는 지문의 내용과 반대로 진술하고 있어 일치하지 않습니다.

* ①: 1문단. 무의사결정의 정의와 그 결과(권력 관계 유지/강화)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②: 1문단.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무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, 이것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.

* ③: 1문단. 무의사결정이 "기존의 지배적인 가치, 신념, 혹은 제도적 절차 등이 동원되어"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* ⑤: 2문단(공공 정책 의제화 방해)과 4문단(가치 내면화로 효과 지속/강화) 내용을 종합하면 타당한 진술입니다.

****2번 문제 해설****

* ****정답:**** ⑤

* ****해설:**** ⑤번 선지는 ㉠의 '의제 설정 통제'가 고착화되지 않았다면 다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. 지문 3문단에서 의제 설정 통제는 '공식적 절차'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엄격한 구속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. 4문단에서는 이것이 '반복적으로 이루어져 ... 고착화된 후에는 ...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인다'고 했습니다. 따라서 '고착화되지 않았다면', 즉 반복된 선례가 없다면 지배 집단은 반드시 기존 방식을 따를 필요 없이 다른 대응을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.

* ①: '공식 절차가 아니다'는 맞지만, 그 기준이 '항상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'고 단정할 근거는 지문에 부족합니다.

* ②: '의제 설정 통제에 따른 쟁점 배제'는 특정 요구를 억압하는 것이므로(1, 3문단), '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정책 결정'과는 정반대입니다.

* ③: 지문은 '의제 설정 통제'라는 전략이 반복되어 관행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지(4문단), 전략 자체가 기존 관행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. 선후 관계가 왜곡되었습니다.

* ④: '의제 설정 통제'는 정부가 정책 대응 선택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'전략'(3문단)이지, 선택 권한 자체의 필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(2문단).

****3번 문제 해설****

* ****정답:**** ②

* ****해설:**** ②번 선지는 <보기> (나) 상황(이익 집단이 시의원에게 '선거 불이익'을 언급하며 압력을 행사)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. 이는 지문 1문단에서 설명하는 무의사결정의 방식 중 "특정 주장을 제기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압력이나 회유가 동원될 수 있으며, 이는 문제 제기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"는 '공공연한 압력을 동원한 직접적 방해'에 해당하며, 그 효과까지 정확히 연결했습니다.

* ①: <보기> (가)는 '중요성 평가절하'(간접적 배제)이며, '직접적 방해'가 아닙니다.

* ③: <보기> (다)는 '복잡한 절차를 통한 기회 박탈'(간접적 배제)이며, 이것이 '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'하는 것은 정반대의 효과입니다.

* ④: <보기> (가)와 (다)는 간접적 배제 방식이며, '공공연한 위협'은 (나)에 해당합니다. '기존 권력 관계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킨다'는 것도 지문의 '유지/강화'와 다릅니다.

* ⑤: <보기> (나)와 (다)가 무의사결정인 것은 맞으나, 무의사결정이 '항상 지배 집단의 명시적 의도에서만 비롯된다'고 지문은 한정하지 않았습니다.
